

6·4 지방선거 확대경

‘사전 투표제’ 효과 볼까

가뜩이나 투표율 낮은데… 최장 5일 ‘황금연휴’ 변수되나

5월 30·31일 사전투표

마감시각 오후6시로 연장

오는 6·4 지방선거가 최대 5일을 걸 수 있는 ‘황금연휴’ 기간에 치러져 투표율이 중요 선거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 4일 수요일에 치러지는데, 이를 뒤인 6일이 현충일(금요일)이고, 주말과 휴일(7~8일)로 연결돼 5일 하루만 휴가를 냈다면 최대 4박5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휴가를 떠나는 유권자가 많아질 경우 전체 투표율이 역대 최



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짧은 휴가를 더 넓힐 수 있는 유권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감소 혹은 더욱 빨리 휴가를 끝내는 등 황금연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투표율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역대 지방선거는 50% 안팎의 투

표율을 기록해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지방선거(1995년) 68.4% ▲2회(1998년) 52.7% ▲3회(2002년) 48.9% ▲4회(2006년) 51.6% ▲5회(2010년) 54.5%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 기반이 탄탄한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감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황금연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안철수 의원이 일으키고 있는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투표

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 연장에 나선 ‘사전투표제’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지도 관심사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6월 4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금요일인 5월 30일과 토요일인 5월 31일, 이를 둘째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제 투표 마감 시 간이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됐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하루 휴가를 내고 황금연휴에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고, 혹시나 연휴를 즐기려는 유권자들이 있다면, 사전투표제를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박대통령 “잘 되길 바란다” 발언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장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6·4 지방선거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아니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민주당 박준규, 김현 의원이 전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기려달라고 질의해 온 데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며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 ▲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이라는 점 ▲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현법재판소는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법무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유 장관이 이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강운태 광주시장이 6일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생활고로 남편을 잃은 유족의 손을 잡은 채 위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운태 시장, 생활고 비관 자살 40대 유족 위로

강운태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정해진 일정을 취소한 채, 광산구 한 병원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집무중 광산구에 사는 40대 남자가 생활고를 겪지 못해 숨졌다는 뉴스를 접한 뒤였다.

이 남자는 사업 실패 후 어려움을 겪은 데다, 이후 취업한 공업사에서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힘들어지자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강 시장은 조문한 뒤, 망자의 부인과 팔순을 넘긴 노모를 위로했다. 망자의 부인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사집 온 다문화주부인 탓인지 강 시장은 부인의 손을 쉽게 놓지 못했다.

“재발 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세상을 등지고 혼자 눈물 짓지 마세요. 그럴 땐 광주시에 기대세요. 용기 잃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조문온 베트남 여성들을 보며) 혼자 지내는 것보다 친구들과 더불어 힘을 얻도록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산 지 7년이 됐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강 시장은 빠른 시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문화주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취임 이후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사랑의 식당이나 복지 단체, 노인시설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해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北,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부

정부 “고위급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종료 이후 일시적인 남북관계 냉각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대화 재개를 놓고 치열한 살아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6일 거부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협의의 틀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급 접촉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가능성을 열려 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문제 삼는다면 내달 18일 학수리 연습이 끝날 때까지 대화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와 형식을 택해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의하든지 우리 제의를 받는 형식으로 수용하면서 남북 후속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장 이계만 교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광주시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6일 이계만(57·조선대 행정복지학과 교수)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이 신임 위원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위원회에서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 신청権 등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9명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장병완 “땡질식 전·월세대책… 경제팀 교체해야”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원장은 6일 정부가 전·월세대책 발표 1주일 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너는 무능한 경제팀 탓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이설픈 월세 파세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장은 “하향안정세를 보인 월세의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땡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함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큰 문제는 땡질식으로 발표한 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 쓰는 부실 대책”이라면서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전문(전대1분)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김정가이하

▶

금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

건물 522㎡(158) 품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총역 4거리 대로변 주거지 377㎡(111) 병의원, 사옥, 학원, 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 건평 228坪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시 1924㎡(59) 대지 9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 건물 3968㎡(1200) 18억 2천

▶

동구 대지 162㎡(582) 건물 3287㎡(994) 요양병원등도 적합 김정 47억3천 은행 18억 매도 27억3천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 16층 건물 3656㎡(1015) 은행 26억 가능 매도 36억3천

▶

전남 대문동 4거리 상업지역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557㎡(1681) 은행 12억 2천